

읍·면·동 종합감사 결과

(남중동, 왕궁면)

■ 감 사 개 요

- 감 사 기 간 : 2016. 11. 21. ~ 11. 25. (5일간)
 - ▶ 남중동 : 2016. 11. 21. ~ 11. 23. (2.5일)
 - ▶ 왕궁면 : 2016. 11. 23. ~ 11. 25. (2.5일)
- 대 상 기 관 : 남중동주민센터, 왕궁면사무소
- 감 사 반 : 감사계장 외 3명
- 감 사 범 위 : 2014. 11. 1. ~ 2016. 10. 31.
- 감 사 중 점
 - ▶ 공무원의 친절 및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 ▶ 예산편성과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 ▶ 주민등록, 인감 등 각종 민원처리 적정 여부
 - ▶ 농·축산업, 사회복지 분야 등의 업무처리 적정성 등

조 치 계 획

■ 총 지적건수 : 총 23건(남중동 13, 왕궁면 10)

- 행정상 조치 : 23건 (시정 10건, 주의 13건)
- 재정상 조치 : 3건/1,168,980원(추징380,000원, 회수788,980원)
- 신분상 조치 : 해당없음

■ 컨설팅 감사 : 9건(회계분야 2건, 총무분야 1건, 민원분야 5건, 산업분야 1건)

■ 일 반 현 황

● 기본 현황

(2016. 10. 31. 현재)

읍면동	행 정 구 역			가 구 수			인 구 수		
	법정리	통(마을)	반	계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남중동	1	43	165	6,073	788	5,285	13,193	6,712	6,481
왕궁면	13	57	-	2,618	1,428	1,190	4,988	2,537	2,451

● 토지 이용 현황

(단위 : km²)

읍면동	구분 총면적	이 용 현 황				
		답	전	대지	임야	기타
남중동	1.75	0.03	0.09	0.93	0.07	0.63
왕궁면	45.8	15	7.3	1.4	16.2	5.9

● 주요 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읍면동	공공기관 및 단체	학교	병 · 의원	약국	교회	아파트 단지	숙박업소	회사
남중동	16	8	26	11	29	9	13	-
왕궁면	9	4	1	2	16	-	2	81

● 직원 현황

(단위 : 명)

읍면동	구 분	계	직 급 별					기타
			5급	6급	7급	8급	9급	
남중동	정 원	12	1	2	4	2	3	
	현 원	12	1	2	3	4	2	
왕궁면	정 원	15	1	4	4	2	2	
	현 원	14	-	6	3	2	3	

■ 감 사 결 과

● 주요 지적사항

1. 복무(관외출장)관리 소홀

-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4조(근무기강 확립)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고 같은 조례 제8조(출장 공무원) 제1항에 따르면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결과 보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 「익산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제6조(출장의 절차)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하고

- ▶ 「익산시 사무전결 규칙」[별표1]에 따르면 읍면동장의 출장은 안전행정국장의 전결로 6급 이하 직원의 출장은 읍면동장의 전결 사항으로 되어있음
- ▶ 따라서 공무원은 행정기관이 아닌 유관단체 등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참석 시 참석하고자 하는 행사가 당해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소속기관의 대표자격으로 참석할 때에 한하여 출장조치가 가능하며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 ▶ ○○○에서는 관외출장 허가를 득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대상기간 중 ○○협의회 선진지 견학 2회,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 2회, ○○○의 날 행사 참여 2회, ○○○○ 선진지 견학 1회, ○○○민의 날 기념위원회 선진지 견학 1회 등 총 8회에 걸쳐 ○장과 ○○계장이 동시예, 경우에 따라서는 ○장과 ○○계장, ○○계장 또는 ○○○○○○○계장 3명이 동시예 관외출장 처리를 하고 유관단체의 선진지 견학(실질적으로는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야유회)에 동행한 사실이 있고
- ▶ ○장(○○5급 ●●●)은 관외출장 시 「익산시 사무전결 규칙」에 따라 안전행정국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데도 ○○○민의 날 기념위원회 선진지 견학(2015. 10. 2.), ○○단협의회 세계문화유산 선진지 견학(2015. 12. 7~ 12. 8.), ○○○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2016. 4. 15.) 등 3회에 걸쳐 관외출장 처리를 하면서 안전행정국장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전결 또는 ○○계장의 대결로 관외출장 처리를 하여 「익산시 사무전결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 적정

-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의 규정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소속 상근직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관내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한 축의·부의 금품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의 규정에 따르면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고,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9호, 2015.01.22.개정)에 따르면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 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 ○○○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중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이 아닌 기부행위 대상자에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총 9회, 483,000원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5건, 250,000원은 축·부의금 등으로 현금을 지급하면서 집행내역서를 징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3. 지역개발채권 매입 업무 소홀

- ▶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6조(채권의 매입) 별표1의 채권 매입대상 및 기준에 따르면 각종 계약 체결 시 공사도급과 용역계약은 대금청구액의 2.5%, 물품구매, 수리, 제조계약은 대금 청구액의 1.5%(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고, 별표 2의 매입의무면제대상에 따르면 일반운영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매입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 ○○○에서는 2015년 무인경비 용역비 등 4건의 용역, 물품 및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245,000원의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하였고, ○○○에서는 2015년 무인경비 용역비 등 4건의 용역 및 물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135,000원의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하는 등 지역개발채권 매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4. 청렴계약제 미 이행

- ▶ 「익산시 청렴계약제 운영규정」 제2조(기본원칙)의 규정에 따르면 익산시에서 공사·용역·물품구매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무원은 청렴이행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계약상대자는 청렴이행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별지 제4호서식)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제4조(청렴이행서약서 제출 요령)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계약담당공무원용(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담당공무원용(별지 제2호서식) 청렴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공사·용역·물품구매의 계약서류에 첨부하여야 하고, 제2항에는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4호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이행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업체 대표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이행서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별지 제4호서식)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별지 제5호서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200만원미만의 소액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 ▶ ○○○에서는 2015년 아동급식 물품구입 등 18건의 물품구입 및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렴이행서약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등 청렴계약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5. 체납지방세 징수업무 소홀

- ▶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4조(읍·면·동장의 분장사무)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르면 소액 체납세 징수 관련 업무(50만원 미만 소액)는 동장의 분장사무로 되어있고, 지방세수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 도모 및 공평과세 구현을 위하여 체납지방세 징수를 목적으로 시(징수과)에서 매분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계획을 시달하고 있어 읍·면·동에서는 체납지방세 징수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데도
- ▶ ○○○에서는 2015년 1분기부터 2016. 11. 23. 감사종료일 현재까지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한 운영계획을 6회(2015년도 3회, 2016년도 3회)에 걸쳐 수립하였으나 그 추진실적은 전무(결과보고 없음)한 실정이며 3,058건/142,175천원의 징수 가능한 체납지방세가 있는데도 징수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고, ○○○에서는 2015년 1분기부터 2016. 11. 25. 감사종료일 현재까지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한 운영계획을 4회(2015년도 2회, 2016년도 2회)에 걸쳐 수립하였으나 또한 추진실적은 전무(결과보고 없음)한 실정이며 2,867건/84,041천원의 징수 가능한 체납지방세가 있는데도 징수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6. 농지원부 관리 소홀

- ▶ 「농지법」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소유실태와 농지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고,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하는데도

- ▶ ○○○에서는 106건(경작면적 1,000㎡ 미만 농가 23건, 임차기간 종료농가 37건, 소유권 변동처리 26건, 사망 말소자 20건), ○○○에서는 56건(경작면적 1,000㎡ 미만 농가 11건, 임차기간 종료농가 12건, 농지원부 자동생성 농가 4건, 미등록 농가구성원 농가 29건) 등의 농지원부 변동발생사항에 대하여 2016. 11. 25. 감사종료일 현재까지 정리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고 있는 사실이 있음

7.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부 적정

-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농업인들의 소득안정시책의 마련)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들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하 “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 ▶ 같은 법 제12조(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제1항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 중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쌀을 생산하고 2. 농약 및 화학비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데도
- ▶ ○○○에서는 익산시 ○○○ ○○○ 1189 등 2필지에 쌀을 생산하지 아니하고 하우스를 설치하여 수박, 대파 등을 재배한 농지에 대하여 2015년도 변동직접지불금 788,98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8. 장애등급 재진단업무 소홀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은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 확인)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장애상태에 맞는 장애등급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2015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 장애등급의 조정 및 재판정(p.58)에 따르면 장애인등록 담당은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장애등급재판정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의 재판정 기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장애등급 재판정 안내 공문을 통보하되, 재판정관련 서류구비 등을 위하여 대상자가 재판정 기한일 최소 1개월 전에는 통보를 받도록 하여 소정기일 내 장애진단을 받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도
- ▶ ○○○에서는 정신 3급 장애인 ●●●의 재판정 기한일이 3년 4개월이 경과하였는데도 2016.11.23. 감사종료일 현재까지 장애등급 재판정 안내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장애인등록 취소 또는 재판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9. 장애인등록증 등 관리 소홀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도록 되어있고,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11-1352000-000586-10, P.98)에 따르면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한 경우에는 기존의 장애인등록증 등을 회수 폐기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 ○○○과 ○○○에서는 장애인이 사망하였거나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한 경우 장애인등록증 등을 회수하여야 하는데도 21명의 복지카드 및 할인카드를 회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10. 의료급여증 관리 소홀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5조(의료급여증의 반납 및 회수)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을 잃어버려 재발급을 받은 자가 잃어버린 의료급여증을 찾은 때, 수급권자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중지된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료급여증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하고,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료급여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수하여야 하며
- ▶ 2015년 의료급여사업안내(보건복지부, 11-1351000-000578-10, P.88)에 따르면 의료급여증의 타인대여 등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증 회수를 철저히 하여야하고, 반납하지 않거나 회수가 어려운 경우 부정사용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확인서를 징구하여 향후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반납·회수된 의료급여증은 보관에 따른 분실 또는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즉시 폐기조치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 ○○○에서는 2016.11.25. 감사종료일 현재까지 ●●● 등 35명의 의료급여증을 회수하거나 확인서를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 등 10명의 의료급여증은 교부처리가 되어 있지 아니하는데도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의료급여증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1. 민방위 업무 추진 소홀

- ▶ 「민방위기본법」 제18조(조직)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제20조(편성 절차 등) 제1항에 따르면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대장은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한다. 다만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와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7항에 따르면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1항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소규모 민방위대의 통합편성)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는 소규모 민방위대는 민방위 대원이 20명 미만인 통·리 민방위대와 민방위 대원이 20명 미만인 직장 민방위대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교육훈련의 면제)제1항에 따르면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훈련을 면제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¹⁾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교육훈련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기관에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증명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 ▶ ○○○○에서는 ●●●● 등 2명이 제외사유 없이 편성 제외되었고, ●●●● 등 4명은 교육면제(유예)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으며, ○○○○○ 민방위대 등 6개 민방위대는 20명 미만인 민방위대인데도 통합 편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12. 사망자 인감대장 직권말소 소홀

- ▶ 「인감증명법」 제11조(인감의 말소 및 부활)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으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는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사망이 분명한 때와 제2호의 규정에는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실종 선고가 있는 것을 안 때로 되어 있는데도

1) 1.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교도소장이 발행하는 재소증명
 2.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출입국관리소장이나 출입국관리출장소장이 발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나 소속 직장의 장이 발행하는 해외여행 또는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2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에서는 경로장애인과로부터 통보받은 매·화장 처리결과 통보 공문에 따라 인지한 인감신고자의 사망사실 19건에 대하여 최단 4일에서 최장 102일간 직권말소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사망신고를 접수한 후 말소 처리한 사실이 있음

13. 인감증명 발급업무 처리 소홀

-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 한 후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의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하는데도
- ▶ ○○○에서는 ●●● 등 13명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인감증명발급대장에 본인 발급 시 수령인만 알 수 있는 사인을 받거나 수령확인 없이 교부한 사실이 있음

14. 인감증명 위임발급 업무처리 소홀

-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 및 인감증명사무 편람(행정자치부, 2015. 2.)에 따르면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기재사항을 기재한 위임장은 수리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위임자는 위임했다는 표시로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하며, 동의서 및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동의 또는 위임일 부터 기산하여 6월로 한다고 되어 있어 위임일자 등 위임장의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 되지 않은 내용은 보완하여 기재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 ○○○, ○○○에서는 ○○○ ●●● 등 9명, ○○○ ●●● 등 7명의 인감증명을 위임받급하면서 위임일자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위임일자가 도래하지 않은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있음

15. 주민등록표 등·초본 위임발급 업무처리 소홀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등)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7호서식과 함께 사용하여 일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그 관계 증명자료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여야 하고
- ▶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9호 서식 유의사항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기재 사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란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을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 ▶ ○○○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위임 발급업무를 추진하면서 세대주 성명 누락, 위임자 성명·주민등록번호 누락, 위임한 사람 성명 불일치, 지문 또는 싸인작성 등 부적정하게 작성된 9건의 위임장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발급한 사실이 있음

16.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소홀

- ▶ 「주민등록법」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1.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2.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할 때 또는 제11조 각 호²⁾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 ○○○에서는 ●●● 등 6명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면서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과오 징수하는 등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7. 주민등록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부 적정

- ▶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고, 제3항의 규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내에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며

2)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2. 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영 제40조제3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영 제4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영 제40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경우
5. 영 제40조제3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최초로 재발급하는 경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 ○○○, ○○○에서는 13명에게 신규 주민등록증 지연발급 및 주민등록 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감경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최대 28,000원에서 최소 2,000원의 금액을 과다 또는 과소 부과한 사실이 있음

● 컨설팅 감사 내역

내 용
<p>●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입</p> <p>「지방재정법」 제63조(수납기관)제2항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수납금의 납입)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p>
<p>●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증지 첨부</p> <p>‘인감증명사무편람’(행정자치부, 2015.2.)에 따르면 인감의 변경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수수료를 징수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를 활용하여 수납하고 인감변경신고가 끝나면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에 신고자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사실(증지첨부)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익산시 수입증지 조례」 제3조(인증기의 사용)에는 시장은 인증기에 의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7조(수수료 납부)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인감변경신고 처리 후 수입증지를 관리대장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p>

내 용

●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족관계 등의 정리에 관한 법률」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5조(사망신고의 의무자)의 규정에 따르면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하며,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리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호적선례 제3-329호 (1993.2.9. 대법원 제정)에 따르면 호적법상 과태료는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만 부과되는 것이며, 비동거 친족으로 사망신고 적격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되지 않음

● 급량비 집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호, 2015.01.22.개정)에 따르면 급량비 중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예산 지출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현금영수증 사용가능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증빙서류로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출을 결정하여 해당 사업자 계좌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음

● 공용차량 관리

「익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 26조(기록관리)의 규정에 따르면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차량배차신청(승인)서 및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28조(지도·점검 등)의 규정에 따르면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량정비관리 사항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위부서에서는 차량을 정비하였을 경우에는 차량의 정비사항을 차량정비대장에 등재하여야 함

내 용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 증의 발급 등)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제1항에 따르면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그 발급대상자에게 12개월 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주민등록등·초본 위임발급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제2항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9호 서식 유의사항에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기재사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란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을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

내 용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급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시행지침에 따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신청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5호),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이하 “농어업인”이라 함)으로서 농림어업 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하고, 신청 농어업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전업적 농어업인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전라북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신청 농어업인이 전업적 농어업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직장근무, 사업장 등록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증지 첩부

‘인감증명사무편람’(행정자치부, 2015.2.)에 따르면 인감의 변경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수수료를 징수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를 활용하여 수납하고 인감변경신고가 끝나면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에 신고자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사실(증지첩부)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익산시 수입증지 조례」 제3조(인증기의 사용)에는 시장은 인증기에 의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7조(수수료 납부)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인감변경신고 처리 후 수입증지를 관리대장에 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

조치계획 총괄표

2016. 11. 21. ~ 11. 23.(2.5일간)

[남중동주민센터]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원)	신분상
계	총 13건	시정: 4 주의: 9	추징 245,000	해당 없음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 적정	주의		
2	지역개발채권 매입 업무 소홀	시정	추징 245,000	
3	청렴계약제 미 이행	주의		
4	체납지방세 징수업무 소홀	주의		
5	농지원부 관리 소홀	시정		
6	장애등급 재진단업무 소홀	시정		
7	장애인등록증 등 관리 소홀	시정		
8	사망자 인감대장 직권말소 소홀	주의		
9	인감증명 발급업무 처리 소홀	주의		
10	인감증명 위임발급 업무처리 소홀	주의		
11	주민등록표 등·초본 위임발급 업무처리 소홀	주의		
12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소홀	주의		
13	주민등록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부 적정	주의		

2016. 11. 23. ~ 11. 25.(2.5일간)

[왕궁면사무소]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원)	신분상
계	총 10건	시정: 6 주의: 4	추징 135,000 회수 788,980	해당 없음
1	복무(관외출장)관리 소홀	주의		
2	지역개발채권 매입 업무 소홀	시정	추징 135,000	
3	체납지방세 징수업무 소홀	주의		
4	농지원부 관리 소홀	시정		
5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부 적정	시정	회수 788,980	
6	장애인등록증 등 관리 소홀	시정		
7	의료급여증 관리 소홀	시정		
8	민방위 업무 추진 소홀	시정		
9	인감증명 위임발급 업무처리 소홀	주의		
10	주민등록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부 적정	주의		

■ 모 범 사 례 (남중동)

힐링 포토존 조성

추진배경

-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남중동 14-58)으로 미관상 좋지 않던 공터에 포토존을 조성하여 주변지역 환경 여건 개선

추진개요

- 사업목적 : 시민과 시장을 찾는 외부 방문객을 위한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여 전통(북부)시장 이용 활성화 증진 도모
- 사업비(예산) 규모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비고
		계	시비	자부담	
힐링 포토존 조성	73m ²	2,000	1,300	700	

※ 달구지, 지게, 향아리, 어부바차, 마사흙, 조팝나무, 철쭉, 달맞이꽃 등

추진성과

- 힐링 포토존 사업계획서 제출 (교육정보과) : 2016. 3. 11.
- 사업계획서 선정 (교육정보과) : 2016. 3. 28.
- 포토존 조성 추진계획에 따른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회의, 예원조경과 업무 협의 : 2016. 4. 15.
- 조경 수 등 구입 및 포토존 조성 착수 : 2016. 4. 18.
- 힐링 포토존 조성 사업 추진 결과 보고 : 2016. 6. 28.

기대효과

- 능동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자치의식 제고 및 협동과 화합의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 모 범 사 례 (왕궁면)

2015~2016년도 특수시책

■ 사 업 명

-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2015년)
- 풍요로운 문화 향유 시민의 삶의 질 향상(2016년)

■ 추 진 배 경

- 농촌 지역 특성 상 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Needs) 존재

■ 추 진 내 용

- 추진 기간 : 2015. 4. ~ 11. / 2016. 4. ~ 11.
- 사업 내용
 - 가. 작은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 나. 신나는 토요학교 프로그램 운영

■ 추 진 실 적

- 2015. 4. ~ 11. : 작은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운영(총 10회)
- 2015. 4. ~ 11. : 신나는 토요학교 프로그램 운영(총 8회)
- 2016. 4. ~ 10. : 작은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운영(총 10회)
- 2016. 4. ~ 10. : 신나는 토요학교 프로그램 운영(총 6회)

■ 기 대 효 과

-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
- 평생학습 기회 제공